보도자료
2018. 4. 24.(총19장)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정치·사법개혁을 위한 27년 전통의 법률전문 지렛대 시민운동"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金大仁(법정치포럼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정개협 상임대표) 趙炳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전 한국부인회 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 우리 대학생들은 사법개혁, 법질서, 미투 운동, 개헌 등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운동 - 적극 지지하지만(78.72%), 악용가능성도 우려(78.01%)

▮ 우리 사회는 법보다 돈과 권력의 힘이 더 세다〈유권무죄,무전유죄〉 - 78.53%

▮ 국민, 백만명 이상 피해 추정 -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법파라치 등에게 고통 받았다(4.05%)

▮ 법관, 검사장, 경찰서장도 지자체장 선출하듯 주민 직선제 도입하라 - 62.61%

◆ 법률연맹, 올해도 법의 날(4/25), 대학생 3천6백56명 법의식 대면조사 발표 ◆

〈조사개요는 2쪽~19쪽, -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2% P**〉

입법/사법감시, 법률/인권교육, 국회의원(300명 전원)과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226개 기초)의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다짐한 공약을 재임기간 4년 동안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정밀 조사 평가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의 **한국대학생법률봉사단**(이하 **법률연맹**)이 **제55회 법의 날**(2018.4.25)에 즈음하여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3천6백56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18일간 "**대면조사**" 하여 대학생들의 법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농민에겐 농기구, 군인에겐 총, 국민에겐 법이 생명인데, 법이 잘못 됐거나 사법이 불공정하다면, **국민통합**은커녕 국가사회의 갈등과 혼란만 야기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청년 대학생들의 **법과 사법**에 대한 **불신**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라고 역설했다.

▣ 대학생들도 저작권법 피해(로펌 등에서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보았다,18.49%)

△ 저작권법 친고죄로 환원하라(처벌은 권리자인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야 72.95%)

▣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힘이 더 세다 (78.53%) / 아니다(20.60%)

△ '유전(권)무죄 무전(권)유죄 현상 있다'에, 동의한다(85.64%) / 부동의(12.99%)

▣ 사법개혁/검찰개혁 등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생각 : 권력분립, 사법민주화 선호

△ 10억원 주면 1년간 교도소 생활 할 수 있다 (51.66%) vs. 아니다 (48.03%)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에 찬성 (응답자의 88.10%)

△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수사권 조정 찬성) (응답자의 70.84%)

△ 수사와 재판과정에 실질적인 배심원제 도입 (응답자의 75.71%)

▣ 헌법 개정(정부안)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생각 : 정부불신보다 국회불신이 심한 듯

△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가장 많아 (응답자의 46.83%)

△ 토지공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68.77%(19.37%+49.40%),찬성=22.51%

〈보도자료 목차〉

Ⅰ. **대학(원)생 법의식 조사** 주요 분석 ····· 03

1. 사법개혁과 관련 "부정비리의혹 **판·검사는 고비처/공수처에서 수사**" (88.10%) ··· 03
2. '우리 사회 **법 안 지켜지고 있다**' 응답자 10명 중 4명꼴 나와 (35.80%) ····· 05
3.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관련, **로펌 등에서 합의금 등 협박 내용증명을** : '받았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 는 답변이 10명 중 2명 꼴(18.49%)로 심각 ····· 07
4. 최근의 **미투(나도 피해자)운동**에 대해, 지지하지만(78.72%), 악용 우려(78.01%) ····· 08
5. 헌법의 정부개헌안에 대해 **'쟁점은 알고 있다'** (46.66%) ····· 10

Ⅱ. 대학(원)생 **법의식 조사 개요** ····· 12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한국대학생법률봉사단>
2. 조사방법 : 24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남/녀, 청년/대학(원)생<휴학생 포함> 3,656명

Ⅲ. 대학(원)생 법의식 조사 **설문 및 응답 내역** ····· 13

〈별첨〉 설문조사 분석 1부. 끝. (상세한 자료는 www.goodlaw.org 공지사항 참조)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법률봉사단>

전화. 02) 523-8760~7 팩스. 02) 585-9228 ≪문의/담당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제55회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법률연맹, 청년대학생 3천6백56명 법의식 조사결과

Ⅰ 대학(원)생 법의식 조사내용 주요 분석

1. 사법개혁과 관련 “부정비리의혹 판·검사 등은 고비처에서 수사” (88.10%)

①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8.10%로 높게 나왔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겨우 10.50%에 불과하였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고비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한다.	3221	88.10%
□ 2. 고위공직차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한다.	384	10.50%
□ 3. 기타/무응답	51	1.39%
계	3656	100.00%

②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을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응답자의 70.84%(지난해의 73.49%)를 차지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5.22%(지난해 22.09%)에 불과했다. 대체로 청년 대학생들은 수사권 독립(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 소위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2590	70.84%
□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922	25.22%
□ 3. 기타/무응답	144	3.94%
계	3656	100.00%

③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형사재판에 회부여부)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5.71% (지난해 77.69%)로 매년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1.53%에 불과했다.

≪ 기소와 재판과정의 실질적 ‘배심원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도입에 찬성한다.	2768	75.71%
□ 2. 도입에 반대한다.	787	21.53%
□ 3. 기타/ 무응답	101	2.76%
계	3656	100.00%

④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난해의 56.30%보다 5%P 정도 높은 62.61%나 나왔고, 반대로 ‘주민직선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78%(지난해 40.20%)여서, 도입찬성 의견이 두 배 정도 많았다.

≪ 법관, 검사장, 경찰서장 등의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주민직선제 도입에 찬성한다.	2289	62.61%
□ 2. 주민직선제 도입에 반대한다.	1235	33.78%
□ 3. 기타/무응답	132	3.61%
계	3656	100.00%

2. '우리 사회 법 안지켜지고 있다' 응답자 10명 중 4명꼴 나와 (35.80%)

① "우리 사회 법 준수 실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57.14%로 나와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9.73%. '매우 잘 안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6.07%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35.80%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의 법준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사회에 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31	6.32%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089	57.14%
□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87	29.73%
□ 4. 매우 잘 안지켜지고 있다.	222	6.07%
□ 5. 기타/ 무응답	27	0.74%
계	3656	100.00%

②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85.64%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99%에 불과했다.

≪ '유전무죄(유권무죄) 무전유죄(무권유죄) 현상' 에 대한 의견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3131	85.64%
□ 2.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475	12.99%
□ 3. 기타/ 무응답	50	1.37%
계	3656	100.00%

③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78.53%로 높게 나와서,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냈다.

≪ ‘우리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에 대한 동의여부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871	78.53%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753	20.60%
□ 3. 기타/ 무응답	32	0.88%
계	3656	100.00%

④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없다” 라는 데 ‘동의한다’ 는 의견이 **34.74%**로 높았으며, ‘동의하지 않는다’ 는 의견은 **64.50%**로 청년 대학생들도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없다’에 대한 동의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270	34.74%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358	64.50%
□ 3. 기타/ 무응답	28	0.77%
계	3656	100.00%

⑤ “10억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 는데 ‘동의한다’ 는 의견이 51.39%로 ‘동의하지 않는다’ 는 의견(48.03%)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 ‘10억을 준다면 1년 교도소생활을 할 수 있다.’에 대해 동의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879	51.39%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756	48.03%
□ 3. 기타/ 무응답	21	0.57%
계	3656	100.00%

또한 ‘처벌받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 는 데 ‘동의한다’ 는 의견도 ‘28.50%’ 나 나와서,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처벌여부에 상관없이 준법을 하겠다는 의식보다는 면피적인 왜곡된 법의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 에 대해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042	28.50%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602	71.17%
□ 3. 기타/ 무응답	12	0.33%
계	3656	100.00%

더욱 ‘악법이라도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05%로 10명중에 4명꼴이서 불리할 경우에는 법을 안지키겠다는 의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악법이라도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야 하는지’ 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241	61.30%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391	38.05%
□ 3. 기타 / 무응답	24	0.66%
계	3656	100.00%

3.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관련, 로펌 등에서 저작권 협박 내용증명 : ‘본인이 받았거나, 받는 것을 보았다’ 는 답변이 10명 중 2명 꼴(18.49%)로 나와.

① “변호사실이나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을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는 응답이 148명이 나와 전체 응답자의 4.05%나 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는 응답이 52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4.44%나 되었다.

이는 로펌 등의 저작권법 위반 내용증명 협박이 현재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반영했다. 지난해의 18.06%와 비슷하고, 2016년도의 29.36%보다는 줄었지만 2014년도 17.7%, 2015년도 18.16%이어 지속적으로 같은 비율이 나와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러한 협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명 중 2명 정도가 내용증명을 받거나 본 경험이 있어서 법 파라치 로펌의 갈취가 대학가에도 널리 퍼져 법 파라치 로펌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 '로펌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 협박내용증명을 받았는지 여부' ≫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148	4.05%
□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528	14.44%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도 없다.	2953	80.77%
□ 4. 기타 / 무응답	27	0.74%
계	3656	100.00%

②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나 그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나서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은 25.38%(928명)인 반면, "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은 72.95%로 매우 높게 나와(2667명), 현행 비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함을 나타냈다.

참고로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는 세계 표준인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친고죄원칙의 규정이지만, 이를 무력화 시키는 단서조항(비친고죄화)을 졸속 삽입—<2005~2006년도에 전문가 법률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졸속 도입한 후 10여 년 동안 법파라치 로펌 등의 난립속에 고교생 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있음>--하므로서 검찰이 나서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비친고죄로 되었다.

≪ '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관계없이, 검찰이 나서서 하는 수사' 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검찰이(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상관없이) 직접 수사(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8	25.38%
□ 2. 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67	72.95%
□ 3. 기타 / 무응답	61	1.67%
계	3656	100.00%

4.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대해 지지(78.72%)

① 남녀 대학생을 불문하고 응답자의 78.72%가 '미투(나도 피해자다)운동' 에 대하여 '매우 지지한다' 는 의견이 42.31%로 높게 나왔고, '지지하는 편이

다’ 라는 의견이 36.41%로 나와 전체적으로 응답자중 2,878명이 미투 운동에 지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에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합쳐서 4.24%(155명)에 불과했다.

≪ ‘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운동’ 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지지한다.	1547	42.31%
□ 2. 지지하는 편이다.	1331	36.41%
□ 3. 별다른 입장이 없다.	571	15.62%
□ 4. 반대한다.	123	3.36%
□ 5. 매우 반대한다.	32	0.88%
□ 6. 기타/무응답	52	1.42%
계	3656	100.00%

②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에도 미투(나도 피해자다)운동의 악용가능성(정치적 이용, 허위사실 유포, 조작)에 대해 우려하거나(25.33%) 약간 우려한다(52.68%)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다. 반면 우려하지 않거나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1.78%였다.

≪ ‘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운동의 악용가능성’ 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우려한다.	926	25.33%
□ 2. 약간 우려한다.	1926	52.68%
□ 3.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602	16.47%
□ 4.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194	5.31%
□ 5. 기타/ 무응답	8	0.22%
계	3656	100.00%

③ 미투 운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의견이 61.93%로 매우 높게 나왔고, 반대로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은 17.01%에 불과하였다.

≪ ‘미투 운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2264	61.93%
□ 2.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622	17.01%
□ 3. 펜스 룰 등 여성차별(배제)만 커질 것이다.	509	13.92%
□ 4. 기타/ 무응답	261	7.14%
계	3656	100.00%

5.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개헌안 쟁점은 알고 있다' (46.66%)

①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는 응답은 5.77%에 불과하였으나,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 는 응답은 46.66%로 응답자의 50% 이상은 개헌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 모른다' (29.62%), '전혀 모른다' (17.26%)는 의견도 많아서 합치면 47%가량의 응답 대학생들이 개헌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와대 발표 헌법개정안의 내용' 에 대한 인지여부≫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211	5.77%
□ 2.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	1706	46.66%
□ 3. 대부분 모른다.	1083	29.62%
□ 4. 전혀 모른다.	631	17.26%
□ 5. 기타/무응답	25	0.68%
계	3656	100.00%

②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많이 수렴되었다고 본다' 는 의견이 53.99%로 높게 나왔으며, 반대로 '대체로 수렴되지 않았다' 는 의견도 32.71%, 전혀수렴 안됨 2.16%로 나왔다.

≪헌법개정안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많이 수렴되었다고 본다.	1974	53.99%
□ 2. 대체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본다.	1196	32.71%
□ 3.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본다.	79	2.16%
□ 4. 기타 / 무응답	407	11.13%
계	3656	100.00%

③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 중 응답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4년 연임의 대통령 중심제' 가 46.83%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 가 26.23%가 나왔다. 반면에 국회 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통령직선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는 17.72%.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6.13%, 정부통령제는 2.05%에 불과하였다.

≪헌법개정을 할 때의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4년 연임의 대통령중심제	1712	46.83%
□ 2. 대통령직선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	648	17.72%
□ 3.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	959	26.23%
□ 4.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224	6.13%
□ 5. 정ㆍ부통령제	75	2.05%
□ 6. 무응답	38	1.04%
계	3656	100.00%

④ **선진국에 없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8.24%가 찬성하고 있는 데, 이는 청년대학생들 층에서 국회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분석된다.

참고로 이 항목은 설문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국회의원을 선출한 목적은 5000만 국민을 대표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 기능과 국민대표 기능을 하게하는 대의정치 즉 간접민주정치 제도가 원칙임에도 이를 '직접민주주의제도라고' 하면서 또한 '국회가 쌈질만 하고 제 기능을 못하므로' 라는 설문은 제왕(군주)이나 독재자가 부정부패 권력남용을 지탄/견제하는 국민대표자를 무력화시키거나 제거할 때에 선출자인 국민이 스스로 소환케 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 '국회의원소환제 도입' 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직접민주주의제도이므로 도입에 찬성한다.	1348	36.87%
□ 2. 국회가 쌈질만 하고 제기능을 못하므로 도입에 찬성한다.	1147	31.37%
□ 3.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도입에 반대한다.	568	15.54%
□ 4. 국회의 정부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도입에 반대한다.	279	7.63%
□ 5. 기타/ 무응답	314	8.59%
계	3656	100.00%

⑤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확대' 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22.51%로 10명 중 2꼴이었으며, 현행 헌법규정이 적당하다는 의견 즉 '토지공개념 확대' 반대의견은

49.40%로 높게 나왔다. 현행 헌법 또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19.37%로서 토지공개념확대에 반대의견은 무려 71.91%나 된다.

≪ '정부 개헌안에서 소위 토지공개념 확대' 에 대한 의견≫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현행헌법도 재산권 침해이므로 없애야 한다	708	19.37%
□ 2. 현행 헌법수준(부분 토지공개념)이 적당하다	1806	49.40%
□ 3. 개헌안처럼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823	22.51%
□ 4. 기타 / 무응답	319	8.73%
계	3656	100.00%

Ⅱ 대학(원)생 법의식 조사 개요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27년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서는 **제55주년 법의 날**(2018년 4월 25일)**을 맞이하여** 청년 · 대학생의 법의식 · 인권상황 및 최근 이슈인 개헌과 미투 운동, 사법개혁 및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등 개별대면조사 방식으로 3,656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8년 3월 27일(화)부터 4월 13일(금)까지 18일 동안 24개 문항(5개 예/아니오 등 응답 포함)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음.

1. 조사기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 **김대인**)
2. 조사방법 : 24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3. 조사대상 : 남/녀,청년/대학(원)생 3,656명

〈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62%P 〉

(가) 성별 응답자 현황

응답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률(%)
① 남	1671	45.71%
② 여	1965	53.75%
③ 무응답	20	0.55%
계	3656	100.00%

(나) 학력별 응답자 현황

응답항목	응답자수(명)	응답률(%)
① 대학교 재학	3055	83.56%
② 대학원 재학	233	6.37%
③ 휴학/기타	368	10.07%
계	3656	100.00%

(다) 연령별 응답자 현황

구분	10대	20대	무응답/ 미표시	계
응답자(명)	56	3492	108	3656
분포률(%)	1.53%	95.51%	2.95%	100.00%

〈참고〉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의 역대 법의 날 법의식조사 현황

연도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대상
2014년도	26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2014. 3. 21. ~ 4. 20	대학생 · 대학원생 2,987명≪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 1.79%p≫
2015년도	25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2015. 4. 13. ~ 4. 20.	남녀 청년 · 대학생 2,125명≪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12%P≫
2016년도	23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2016. 3. 23. ~ 4. 12.	남녀 청년 · 대학(원)생 5,947명≪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27%P≫
2017년도	24개 문항의 설문으로 대면조사	2017. 3. 17. ~ 4. 7.	남녀 청년 · 대학(원)생 4,259명≪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50%P≫

Ⅲ 대학(원)생 법의식 조사 설문항목 및 응답내역

▣ 귀하는 우리사회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31	6.32%
□ 2.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089	57.14%
□ 3.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087	29.73%
□ 4. 매우 잘 안지켜지고 있다.	222	6.07%
□ 5. 기타/ 무응답	27	0.74%
계	3656	100.00%

▣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 돈 있

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를 뒤집어 쓴다)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	3131	85.64%
□ 2.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475	12.99%
□ 3. 기타/ 무응답	50	1.37%
계	3656	100.00%

▣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해 주기바랍니다.)

01)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241	61.30%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391	38.05%
□ 3. 기타 / 무응답	24	0.66%
계	3656	100.00%

02)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겠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042	28.50%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602	71.17%
□ 3. 기타/ 무응답	12	0.33%
계	3656	100.00%

03) 우리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면 잘 살 수 없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270	34.74%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2358	64.50%
□ 3. 기타/ 무응답	28	0.77%
계	3656	100.00%

04) 우리사회에서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2871	78.53%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753	20.60%
□ 3. 기타/ 무응답	32	0.88%
계	3656	100.00%

05) 10억을 준다면 1년 교도소생활을 할 수 있다.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예 (동의한다)	1879	51.39%
□ 2. 아니오 (동의하지 않는다)	1756	48.03%
□ 3. 기타/ 무응답	21	0.57%
계	3656	100.00%

▣ 귀하는 법원(사법부)의 판결과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영향을 전혀 안 받고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227	6.21%
□ 2.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이다.	2386	65.26%
□ 3.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것이다.	932	25.49%
□ 4. 정치권이나 사회적 현상이 법원에 영향력을 미칠수 없다.	70	1.91%
□ 5. 기타/무응답	41	1.12%
계	3656	100.00%

▣ 귀하는 검찰의 수사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영향을 전혀 안받고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164	4.49%
□ 2. 영향을 조금은 받을 것이다.	2154	58.92%
□ 3.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것이다.	1236	33.81%
□ 4. 정치권이나 사회적 현상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수 없다.	80	2.19%
□ 5. 기타/무응답	22	0.60%
계	3656	100.00%

▣ 귀하는 변호사실이나 로펌(Law-Firm)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합의금을 지불하라는 등의) 내용증명이나 어떤 통지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친구나 아는 분 중에서 그런 협박성 통지를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본인이 직접 받아 본 적이 있다.	148	4.05%
□ 2.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528	14.44%
□ 3. 직접 받은 적도, 주변에서도 본 적도 없다.	2953	80.77%
□ 4. 기타 / 무응답	27	0.74%
계	3656	100.00%

▣ 귀하는 저작권자의 개인적 권리인 저작권침해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나 그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직접 나서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검찰이(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상관없이) 직접 수사(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8	25.38%
□ 2. 저작권자의 고소나 의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67	72.95%
□ 3. 기타 / 무응답	61	1.67%
계	3656	100.00%

▣ 귀하는 우리 사회의 미투(# Me Too · 나도 피해자)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지지한다.	1547	42.31%
□ 2. 지지하는 편이다.	1331	36.41%
□ 3. 별다른 입장이 없다.	571	15.62%
□ 4. 반대한다.	123	3.36%
□ 5. 매우 반대한다.	32	0.88%
□ 6. 기타/무응답	52	1.42%
계	3656	100.00%

▣ 귀하는 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운동의 악용가능성(정치적 이용, 허위사실유포, 조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매우 우려한다.	926	25.33%
□ 2. 약간 우려한다.	1926	52.68%
□ 3.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602	16.47%
□ 4.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194	5.31%
□ 5. 기타/ 무응답	8	0.22%
계	3656	100.00%

▣ 귀하는 미투운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2264	61.93%
☐ 2. 성범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622	17.01%
☐ 3. 펜스 룰 등 여성차별(배제)만 커질 것이다.	509	13.92%
☐ 4. 기타/ 무응답	261	7.14%
계	3656	100.00%

▣ 귀하는 많은 선진국처럼 법관이나 검사장이나 경찰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도입(주민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주민직선제 도입에 찬성한다.	2289	62.61%
☐ 2. 주민직선제 도입에 반대한다.	1235	33.78%
☐ 3. 기타/무응답	132	3.61%
계	3656	100.00%

▣ 귀하는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공수처/고비처)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찬성한다.	3221	88.10%
☐ 2. 고위공직차비리수사처 신설에 반대한다.	384	10.50%
☐ 3. 기타/무응답	51	1.39%
계	3656	100.00%

▣ 귀하는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소위 수사권 조정문제)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2590	70.84%
☐ 2.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922	25.22%
☐ 3. 기타/무응답	144	3.94%
계	3656	100.00%

▣ 귀하는 우리나라도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기소과정에 참여하는 '배심제도의 도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도입에 찬성한다.	2768	75.71%
☐ 2. 도입에 반대한다.	787	21.53%
☐ 3. 기타/ 무응답	101	2.76%
계	3656	100.00%

▣ 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법개정 정부안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많이 수렴되었다고 본다.	1974	53.99%
☐ 2. 대체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본다.	1196	32.71%
☐ 3.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본다.	79	2.16%
☐ 4. 기타 / 무응답	407	11.13%
계	3656	100.00%

▣ 귀하는 3일동안(3.20~22일) 발표된 헌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조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211	5.77%
☐ 2. 쟁점 정도는 알고 있다.	1706	46.66%
☐ 3. 대부분 모른다.	1083	29.62%
☐ 4. 전혀 모른다.	631	17.26%
☐ 5. 기타/무응답	25	0.68%
계	3656	100.00%

▣ 귀하는 헌법개정을 할 때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습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4년 연임의 대통령중심제	1712	46.83%
☐ 2. 대통령직선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	648	17.72%
☐ 3. 현행과 같은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	959	26.23%
☐ 4.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224	6.13%
☐ 5. 정 · 부통령제	75	2.05%
☐ 6. 무응답	38	1.04%
계	3656	100.00%

▣ 귀하는 선진국에 없는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직접민주주의제도이므로 도입에 찬성한다.	1348	36.87%
☐ 2. 국회가 쌈질만 하고 제기능을 못하므로 도입에 찬성한다.	1147	31.37%
☐ 3.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도입에 반대한다.	568	15.54%
☐ 4. 국회의 정부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도입에 반대한다.	279	7.63%
☐ 5. 기타/ 무응답	314	8.59%
계	3656	100.00%

▣ 귀하는 이번 개헌안에는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민족' 이란 용어가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삭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1315	35.97%
☐ 2.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688	18.82%
☐ 3. 삭제하든 유지하든 상관없다.	1565	42.81%
☐ 4. 기타/ 무응답	88	2.41%
계	3656	100.00%

▣ 귀하는 토지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제한을 가능케 하는 토지 공개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응답자(명)	응답률(%)
☐ 1. 현행헌법도 재산권 침해이므로 없애야 한다	708	19.37%
☐ 2. 현행 헌법수준(부분 토지공개념)이 적당하다	1806	49.40%
☐ 3. 개헌안처럼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823	22.51%
☐ 4. 기타 / 무응답	319	8.73%
계	3656	100.00%